



포털 뉴스 개혁 필요성 느껴... 정부·정치권 개입은 배제해야

포털 뉴스서비스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몇 년째 뜨거운 감자다. 올해 역시 정치권을 비롯해 각계 각층에서 포털의 뉴스서비스와 함께 제휴매체를 심사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전·현직 평가위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 위원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포털 뉴스와 제평위의 문제점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인터뷰 참여자는 전·현직 위원장단을 포함한 학계 및 법조계, 언론계 인사 10명으로 구성됐다

| 인터뷰 참여자 구성 |

- 언론계 A, B, C, D, E, F 위원 6명
- 학 계 A, B 위원 2명
- 법조계 A, B 위원 2명

포털 개혁, 정치권 입맛에 맞게 개악될 우려 존재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 ‘포털 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추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시 발표된 포털 개혁방안으로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투명화 방안 ▲제평위의 속기록 작성·공개 의무화 ▲제평위원 자격 기준 법적 규정 등 제평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전·현직 평가위원들에게 ‘포털 뉴스 개혁’과 ‘제휴평가위 법제화’ 시도에 대한 방통위 및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다수의 위원은 포털 뉴스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이러한 개혁이 정치권이나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학계에 몸담고 있는 A위원은 “포털 뉴스를 개선 또는 개혁하자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특정 집단이나 조직에서 이를 주도해서는 안 되고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며 “정치권의 포털 뉴스관련 목소리를 자신에 대한 비판의 여부, 수준, 방향 등에 의해 그 정도가 결정되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고려가 마치 시민의

목소리인 듯 주장한다. 방통위 및 정치권의 목소리에
는 시민의 편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계 A위원 역시 “정치권의 입맛에 맞게 개악될
우려가 있다”며 “최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
치들이 필요하다. 이해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는 없다 하더라도, 현재 규정과 개정되는 규정에 따
라 의사 개진을 할 수 있는 위원들이 많아야 한다”
고 전했다.

언론계 B위원장도 “개혁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정부나
정치권에서 나설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언론계와
포털, 시민단체 등이 함께 고민해서 개혁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포털만을 대상으로 한 업계의 개혁 목소리에 대해서
도 우려가 제기됐다.

언론계 C위원은 “확증 편향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추천 등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라면서도 “그러나 그 대상이 비단 포털만은 아닌 듯
싶다. 포털보다 유튜브를 통한 뉴스 영상 소비 영역
이 훨씬 커지고 있고, 유튜브의 확증 편향은 포털보
다 훨씬 심각해, 포털만을 대상으로 뉴스 소비를 개
혁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좀 더 투명하게 운영돼야 vs 시행착오 끝에 나온 불가피한 선택

제평위 위원 선임 기준이나 절차, 구성 등 제평위 운
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문제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렸다.

학계의 B위원은 “제평위가 결국 네이버와 다음 양사
의 종속기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 양사가 관여하는 듯하다”라며 “좀 더 투
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했다.

언론계 B위원장도 “제평위 위원 선임 기준은 좀 더 강
화하고, 선임 절차 등은 투명해야 한다고 본다”며
“단지 운영에 있어서는 공개만이 답은 아니라고 본

다. 운영 투명성은 어떤 식으로든 검증을 통해 문제
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조계 A위원의 경우 “위원선임과 관련하여, 임기 보
장이 필요하다. 추천한 곳에서 자신들의 의사에 따
르지 않은 제평위원들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교
체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포털 측에서 회의 전에 필요한 사전 정보
를 주지 않거나, 매우 늦게 주는 문제가 있다”며 “당
일 회의에 참석해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굉
강히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다 보니, 날림으로 진행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반면 제평위 운영이 마치 불공정하고 편법이 있는 것
처럼 매도되고 있어 안타깝다는 의견도 나왔다.

언론계 D위원은 “일부에서 제평위원 구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지금의 구성이 합
리적이라 생각한다”며 “그동안 이해관계가 있는 전
현직 기자들이 포함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
었지만 직접 활동해보니 이해관계가 작용하기 힘든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오히려 구성원 개혁이라
는 명분 아래 정치의 개입이 커지면 진보와 보수라는
양극단의 이데올로기가 언론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언론계 F위원장도 “투명성에 대한 우려는 많다. 하지만
정작 위원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애초 우려와는 달
리 투명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활동 기간이 늘어날수
록 현재의 구조가 다년간 시행착오 끝에 나온 불가
피한 선택임을 이해하게 되는 구조”라고 전했다.

언론계 C위원 역시 “제평위 운영이 투명하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입점 심사나 제재 심사에서 불
이익을 받은 언론사를 중심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인터넷 언론사 일부
는 홍보 대행사와 다를 바 없는 업체들도 있다. 제평
위 심사는 그런 업체들이 언론사의 이름으로 광고성
기사를 뿌리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〇〇 운영에 있어서는 공개만이 답은 아니라고 본다.
운영 투명성은 어떤 식으로든 검증을 통해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〇〇



15개 단체 추천 방식 문제 많아...

전문성 갖춘 위원 참여해야

한편 위원 대부분은 현재의 15개 단체 추천 방식이 추천 위원의 전문성과 더불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일부 추천 위원들의 경우 전문성, 즉 보도 윤리나 저널리즘의 기초도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에 임하고 있어 비효율과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언론계 F위원은 “제평위의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현재의 15개 단체 추천 방식은 단체의 유관성이나 단체 추천 위원의 전문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B위원도 “제평위 위원선임은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일부 단체에서 추천된 위원의 경우 가끔 언론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나 지식이 부족한 분들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학계의 A위원 역시 “15개 단체에서 2명씩 추천하게 되면 사실상 그것으로 위원회 구성은 끝난다. 개별 위원에 대한 자질 검증 등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위원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는 위원의 자질 문제와 관련 있다. 언론 산업, 언론 현장, 언론 구조 등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추천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언론사 심사 참여는 필수 vs 이해 충돌 우려돼

제평위가 언론사의 포털 제휴 심사를 전담하는 기구로서 언론사가 언론사를 심사하는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계와 타 업계 위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었다.

언론계 위원들 대부분은 포털 제휴가 언론사와 포털 간의 관계인 만큼, 언론계 전반에 대한 시장원리를 잘 알고 있는 언론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언론계 A위원은 “언론사가 언론사를 심사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도 있지만 현장을 알고 있고, 현재의 규정이 있는 한, 무조건 봐주기도 어려운 구조”라며 “규정대로 제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식의 우려는 일부 있을 수는 있어도 실제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언론계 D위원은 “소비자 단체와 학계의 의견만으로 언론사가 평가되면 일부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매체의 현실을 제대로 알기 어려워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판단이 이뤄질 위험이 크다고 본다”며 “특히 현재 제평위원들도 지역매체에 대해서는 현황을 제대로 알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 언론사가 평가에서 배제될 경우 이런 오류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언론계 E위원도 “멀티미디어의 발달로 시시각각 변하고 소비자의 니즈도 달라지는 현재의 미디어 생태계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느끼고 있는 게 언론계 현업종사자들이다. 현업의 전문성과 시의성을 단순히 이해 충돌로 치환하기에는 생태계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계 및 법조계 위원들 다수는 언론사가 언론사를 심사하는 것이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학계 A위원은 “이해 충돌 문제는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본다. 특히 현업 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현직을 추천하는 것이 문제로 부각된다”며 “다만 현업 단체 이외에서 추천하는 위원 중 현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많이 없기에 언론 현직에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돼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법조계 A위원도 “경쟁사의 입점이나 CP(콘텐츠 제휴)의 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고, 법조계 B위원 역시 “제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제평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추천기관이 언론 단체인 것과 추천된 위원이 언론인인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서 언론사 인사를 배제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유재형 yoojh1999@kaa.or.kr

66

위원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는
위원의 자질 문제와 관련 있다.

언론 산업, 언론 현장, 언론 구조 등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추천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